

김경진 “새 시대 열겠다” vs 장경태 “무능한尹정권, 심판”

〈與〉

〈野〉

22대 총선 격전지

서울 동대문을

뉴타운 보수화 등에 與野 박빙 여론조사서 장 45%, 김 40% 기록 김경진, 지역발전 이뤄낼 것 강조 장경태, 동부간선 지하화 등 공약

서울 동대문구 전농1·2동, 장안1·2동, 답십리1·2동으로 구성된 서울 동대문구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6.01㎢)이 좁은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9번의 총선에서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가 이긴 것은 세 번 뿐이었다.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등 보수계열 정당에서 의석을 가져가는 곳이기도 했다. 특히 흥준표 현 대구시장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다.

다만 19대 총선부터는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들이 연속 3번 승리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동대문구는 국민의힘에게는 ‘헛지’가 됐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장경태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해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맞붙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선 장 후보가 3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후보 SNS 갈무리

선의 이 후보를 10.73%포인트 차로 넉넉히 따돌렸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민주당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뉴타운의 보수화 등으로 인해 2022년 대선 당시엔 일부 지역에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했고, 같은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등 21대 총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장경태 민주당 의원. /후보 SNS 갈무리

않은 ‘격전지’에 속한다. 24일 현재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는 현역의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이 장 의원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 의원은 45%, 김 전 의원은 40%를 기록했다. 양자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4.4%포인트) 내다. 다만 여야는 해당 지역을 박빙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리서치엔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조사한 것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무선 자동 응답전화조사(ARS) 50%·무선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50%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인물론’ 김경진, 野 12년 비판하며 “새 시대 열겠다” 강조

서울 동대문구에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는 김경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활약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보특별단장을 지낸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구 당협위원장에 내정됐고, 지난해에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무난하게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경진 전 의원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기 위해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의 홍보물을 확인해보면 “지난 12년 만족하셨습니까. 제가 동대문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던 12년

을 비판하며, 본인이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경태, 4년간 의정활동 강조하며 ‘정권심판’ 내세워

서울 동대문구의 ‘디펜딩 챔피언’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를 다니며 동대문구와 인연을 맺었으며, 평당원으로 시작해 15년의 시간 동안 정당 내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장 의원은 “국민과 함께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정권심판론’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과 875원’ 발언을 비판하고,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급거 귀국을 두고 “정작 호주에서 할 일이 없었나 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면목선 사업’ 진행,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일부 착공 등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그는 ‘더 빠르고 안전한 동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완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개통 ▲신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답십리 문화거리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공식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중단’

야권 “총선 겨냥한 관권 선거” 반발 물가안정 등 정부핵심 정책 홍보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역점에 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현안을 챙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오는 28일 시작되는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잠시 중단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연초에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해결한다는 자세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해왔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스물한 차례(한 차례 불참)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회를 비롯해 강원(2회)·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창원·대전·충남 서산·전남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야권은 민생토론회를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련 금지)를 위반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개하고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민생토론회의 일시 중단은 4·10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을 시작으로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 이후 재개될 민생토론회는 그동안 주요 공약 사항의 점검과 민생 현안을 청취한 만큼 정책 이행 속도 등을 점검하는 ‘관리형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의 홍보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들은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성 정책실장은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불거진 물가 문제와 관련 전제적인 물가는 안정된 상태나 특정 품목의 수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채소, 과일류가 될 거 같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지적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게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美 Fed “지속적인 인하 가능성은 불확실”

» 1면 ‘스위스 금리 인하’서 계속

ECB “지표에 따라 대응할 것”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연 3.50%로 4차례 동결한 상태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8%를 시작으로 2%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지표에 따라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첫 금리인하 이후에도 금리와 관련된 특정 경로를 미리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핵 미사일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상태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임금 및 이익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리인하 시작이 연속적인 인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물가상승률의 변동성이 커 금리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9.1%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대를 유지하며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6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점도표(Dot plot)를 보면 올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4.5~4.75%를 유지했지만 2025년은 3.75~4.00%로 기존(3.25~3.50%)보다 높아졌다. 6월 금리인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인하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의 토마스 조던 총재가 2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금리인하를 발표하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는 22일부터 0.25%포인트가 인하된 1.5%의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우리나라도 현재 물가상승률이 2월 기준 3%대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물가안정기로의 전환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초 인플레이션 발생 이후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3.2년 걸린다고 했다. 물가안정기를 감안하더라도 이전수준의 금리까지 돌아가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통화위원회(2월 22일 통화정책방향)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